

기독교 사회윤리학에서 바라 본 한국 개신교의 경제운동에 대한 평가*

최경석 (남서울대학교 조교수)

I. 들어가는 말

II.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방법론-그리스도의 왕권통치

1. 기독교 사회윤리의 흐름
2. 칼 바르트에게서 사회윤리 가능성
3.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사회윤리
4. 그리스도의 왕권통치로서 공공신학

III. 한국 개신교의 경제운동

IV. 한국 개신교 경제운동에 대한 사회윤리적 평가와 그 과제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8.42.10>

* 본 논문은 2017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ABSTRACT •

An Evaluation of Korean Protestant Economic Movement from the
Viewpoint of Christian Social Ethics

Prof. Choi, Kyung Suk (Namseoul University)

Since humanity lives in a social system, human beings are ethical beings that should bear responsibility for all the interactions that take place in social relationships. It is useful that all ethics are social ethics. If you attach Christianity to it, it will become Christian social ethics.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directly or indirectly participated in social problems in history. By doing so, this research proposes alternatives and directions for solutions. What is noteworthy here is how Christians have participated in the economic issue. This study evaluates this issue based on the Christian social and ethical aspects from the acceptance of Protestantism to the present till now. Finally, it would be a necessary task for Korean Protestant church today to suggest future plans.

Key words: Social Ethics, the Economic Issue, Korean Protestant Church, Karl Barth, Ecumenical Movement

I. 들어가는 말

모든 인간은 사회제도 속에서 존재하며 심지어는 “나”란 주체도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¹⁾ 인간은 사회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호작용에 책임을 짊어져야 할 윤리적 존재다. 그러기에 모든 윤리는 사회윤리라는 말은 적절하다.²⁾ 여기에 기독교라는 특수한 시각으로 조망되는 것이 기독교 사회윤리인 셈이다.

한국 개신교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회문제들에 직간접으로 참여함으로써 해결책에 대한 대안과 방향성을 나름대로 제안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경제문제들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다. 개신교의 수용부터 현재까지 역사적 추적을 통해서 그것을 기독교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과 앞으로의 방안을 제시하는 일은 오늘의 한국 개신교에게 일부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2장에서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방법론이 무엇인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개신교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왕권통치가 칼 바르트(Karl Barth)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패러다임 속에서 기술될 것이다. 이 후에 제3장은 한국 개신교가 펼친 경제운동을 역사적으로 추적할 것이다. 제4장에서 한국 개신교의 경제운동을 제2장에서 언급한 기독교 사회윤리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작업될 것이다.

1) Rich, A., *Wirtschaftsethik Bd. I, Grundlagen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Gütersloh: 1987), 강원돈 역, 『경제윤리 I』,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3), 45-46.

2) Wendland, H., D., *Einführung in die Sozialethik*, (Berlin: 1963), 7.

II.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방법론-그리스도의 왕권통치

1. 기독교 사회윤리의 흐름

기독교에서 사회윤리라는 개념은 19세기부터 언급과 논의되었다.³⁾ 독일에서는 칼 맑스(Karl Marx)를 위시로 한 공산주의 사상이 대두되면서 전통적인 3신분의 사고개념에 노동자 계급이 첨가된 4신분의 사고개념이 논의되면서 사회윤리가 언급되었다. 미국의 경우 이른바 사회복음(social gospel)운동이 시작되면서 사회윤리의 개념이 논의되어 영국으로 확산되었다.

기독교에서 사회윤리의 기초를 세우는 데 중요한 교리는 종말론이다.⁴⁾ 왜냐하면 루터(Martin Luther)를 대변하는 “두 왕국론”을 필두로 하여 칼뱅(John Calvin)을 대변하는 “그리스도의 왕권통치론”으로 발전한 기독교 사회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실존에 관해 늘 질문을 던지고 답을 고민해야하기 때문이다. 종말론적 시각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이 또는 죄의 세력이 하나님에 대한 승리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부활 사건은 죄의 세력이 세상의 최종권력이 아님을 보여줬다. 이 그리스도의 사건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인 셈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세상에 대한 주권이 펼쳐진다. 세상은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임박한 종말론 속에서 존재한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세상에 대한 해석으로 궁극 이전의 것과 궁극적인 것을 구분

3) Jähnichen, T., *Sozialethik*, Honecker, M., (Hg.), *Evangelisches Soziallexikon*, (Stuttgart: 2001), 1440.

4) 위와 같은 견해로 Rich, A, 앞의 책, 151.

하여 설명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것의 빛에서 궁극 이전의 것이 조망되고 궁극 이전의 것의 고유한 법칙에 비판을 가하면서 궁극적인 것을 향해 가는 일종의 형성의 윤리가 가능하다.⁵⁾ 귄터 브라켈만(Günter Brakelman)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종말론적 긴장관계를 통해서 세상에서 지속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이른바 “보다 더의 윤리 혹은 비교급의 윤리(Ethik des Komparativs)”를 주장한다.⁶⁾ 아르투르 리히(Arthur Rich)는 세상의 상대적인 것과 하나님의 절대적 것 사이의 상관성을 통한 제도적 매개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현실 세상에 구체적인 사회윤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실존적 종말론”을 주장한다.⁷⁾

로마 가톨릭에서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론의 개념은 1891년 교황 레오 13세의 *Rerum novarum*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교서를 발행한 이후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된 “교회와 세계에 대하여”까지 이르렀다. 로마 가톨릭을 제외한 기독교 측(정교회와 개신교)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사회윤리 또는 사회론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개진되는데, 1925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차 생활과 노동(Life and Work) 세계대회를 시작으로 세계교회협의회(CWC)의 총회까지 이르러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 특히 한국 개신교에서 사회윤리의 방법론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왕권통치”에서 접근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아울러 에큐메니칼 운동에서도 한 동안 “그리스도의 왕권통치”에서 사회윤리들의 많은 논의가 있었다. 먼저 “그리스도의 왕권통치”를 현대 개신교 신학에서 발전시킨 칼 바르트의 입장을 살펴보고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펼쳐진 사회윤리의 방법들이 논의되면서 한국 개신교에 적절한 사회윤리방법론

5) Bonhoeffer, D., *Ethik*, (München: 1981), 253.

6) Brakelmann, G., Hg., *Günter Brakelmann: Ein Theologe in Konflikten seiner Zeit*, (Münster: 2006), 33-34.

7) Rich, A., 앞의 책, 187.

을 논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본다.

2. 칼 바르트에게서 사회윤리 가능성⁸⁾

독일의 경우 나치(Nationalsozialismus, 국가사회주의)의 등장과 그들을 통한 박해는 기독교들이 자유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 중심에 1934년 바르멘 신학선언이 서 있다. 이 선언의 제2항에서 교회는 공공성에 위탁된 것이라 천명한다. 바르멘 신학선언의 주요 인물인 칼 바르트에게서 그리스도의 왕권통치의 사회윤리가 가능해진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사회윤리의 가능성은 초기 바르트와 후기 바르트를 구분지어 설명될 때, 보다 설득적일 수 있다. 바르트의 나치에 대한 경험은 그에게 있어 신학적으로, 특히 사회윤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기 때문이다.⁹⁾

초기 바르트의 경우, 특히 1919년 독일 튀링엔 탐바하(Tambach)에서 강연한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에서 세상은 철저히 부정된다. 바르트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권통치를 강조하면서 세상과의 철저한 거리두기를 주장한다. 바르트에게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지 인간은 아니었다. 상대적인 세상이 그 아무리 긍정(Ja)일지라도 절대적인 하나님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은 철저히 부정(Nein)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 사이에 그 어떤 상응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¹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바르트에게서 윤리는 존재하기 어렵다. 오히려 하나님의 철저성만이 남아 있다. 종말론적 시각에서 초기 바르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도성이 인정된 이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종말론적 심판”을 강조한

8) 칼 바르트에게서 사회윤리의 가능성 부분은 리히의 의견에 기대어 기술하고자 한다.

9) 이런 견해로 위의 책, 161.

10) Barth, K., *Der Römerbrief*, 2. Aufl. (München: 1922), 419이하.

다. 그렇다고 해서 초기 바르트가 상대적 세상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세상에서도 상대적으로 선한 것이 있음을 인정한다. 예컨대 정의가 그 범주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이것도 이른바 “중간상태에 속한 것”이고 괄호 안에 존재하는 부차적인 것이다. 오직 유효한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적 종말론에 입각한 하나님의 주도성이다. 초기 바르트의 경우 상대적인 것에 대한 사회윤리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바르트에게 있어 나치의 경험은 그가 그리스도의 왕권통치를 철저히 인정하고 상대적 세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후기 바르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상대적인 세상 사이의 ‘유비(Analogia)’를 통해서 사회윤리를 펼쳐나간다. 에밀 부룬너(Emil Brunner)는 ‘존재의 유비(analogia entis)’로 설명될 수 있는 ‘동일성’과 ‘비동일성’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사회윤리가 가능함을 주장했다면, 후기 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절대적인 존재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계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관계의 유비(analogia relationis)’를 통해서 사회윤리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유비는 신앙에서만 파악될 수 있기에 신앙의 유비라고 봐도 무방하다. 삼위일체의 내재성에 근거한 관계 유비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비다. 예수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며, 예수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존재이며, 예수의 인간성은 하나님의 신성의 유비다. 예수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일들은 인간들에게 모범이기에 인간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러하시기에 그들도 그러해야 한다. 즉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가 이웃을 사랑했기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자신에 의해 근거된 사랑을 하도록 부름을 받고 그렇게 움직이게 된 존재로서 사랑을 하는 것이다”.¹¹⁾ 여기에서 윤리가 가능

11) Barth, K., *Kirchliche Dogmatik*, Bd. III/2, 261, Rich, A., 앞의 책에서 재인용.

해진다.

후기 바르트에게서 윤리의 가능성이 열렸음에도 사회윤리적 입장들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바르트가 나치를 경험한 후, 그는 국가에 대한 문제를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권통치의 시각에서 피력한다. 하나님의 유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기에 세상의 권력 즉 국가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바르멘 신학선언 제2항은 그리스도의 왕권통치를 벗어난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배격하면서 국가(시민공동체, Bürgergemeinde)와 교회(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Christengemeinde)가 두 개의 원으로 교회는 세상에 포함된 원이다.¹²⁾ 국가는 그리스도의 왕권통치의 관계적 유비 속에 존재한다. 그렇기에 국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관계적 유비 속에서 정의를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국가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점에서 초기 바르트와는 다르게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이 서로 매개될 여지가 놓여진 것이다.

3.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사회윤리

로마 가톨릭을 제외한 에큐메니칼 운동은 당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산업의 발달과 교역의 증가는 경제적 지구화를 촉진시켜, 유럽 국가들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게 되는 하나의 가능성을 마련했다. 특히 19세기 사회문제는 유럽 또는 아메리카의 국내 문제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선교의 확산으로 피선교국가들에서 발생한 문제들도 포함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회문제들에 에큐메니칼 운동은 침묵할 수 없었기에, 사회문제들에 대한 모종의 일치된 의견과 대안이 필요했다. 즉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책임이 절실한 시대였

12) Barth, K., *Christengemeinde und Bürgergemeinde*, (München: 1946), 13.

다.¹³⁾

1910년 에딘버러(Edinburgh) 제1차 “세계선교대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는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표방하였으나, 기독교 국가들 사이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1925년 스톡홀름(Stockholm) 제1차 “생활과 노동(Life and Work)” 세계대회는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사회윤리가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 세계대회에서 논의된 사회윤리의 방법은 상당히 낙관적이고 이상적인 측면에 머물렀음에도 말이다.¹⁴⁾ 이 세계대회 이후 “생활과 노동”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윤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연구했다. 특히 경제공황을 통한 경제문제와 공산주의 국가, 파시즘, 그리고 나치즘과 같은 민족주의 문제들은 “생활과 노동”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해결해야 할 것들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1937년 옥스퍼드(Oxford) 제2차 “생활과 노동” 세계대회가 열렸다. 이 세계대회에서 영국 평신도 신학자 올드햄(J. H. Oldham)은 사회윤리의 방법론들 중 하나인 “중간공리(middle axiom)”를 제시했다. “중간공리”이론은 일정한 시대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현상들을 절대적 것의 빛에서 조명하여 투명성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상대적인 것은 단순히 부정될 수 없다. 오히려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에 비추어 계속 변혁되는 것을 찾는 것이 “중간공리”인 셈이다. 기독교에서 불변의 하나님의 사랑이, 또는 예수를 통해 모범이 된 사랑이 변화무쌍한 현실사회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찾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간공리”

13) Lender, M., *Ökumenische Bewegung und Sozialethik*, in: M. Honecker (Hg.), *Evangelische Soziallexikon*, (Stuttgart: 2001), 1183 또한 Jähnichen, T., *Vom Industrieuntertan zum Industrieburger, Der soziale Protestantismus und die Entwicklung der Mitbestimmung (1848-1955)*, (Bochum: 1993), 284.

14) 이를 위해서 최경석,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19집(2010), 212.

이론에 따르면, 기독교 사회윤리는 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1948년 제1차 암스테르담(Amsterdam)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서 채택되어 1968년 제4차 오프살라(Uppsala) 총회 이전까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논의된 패러다임인 “책임사회론(responsibility society)”은 “중간공리”이론에 그 기본 터를 잡고 있다. 제1차 암스테르담 세계교회협의회는 제2차 세계대전을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인간의 무질서 또는 인간의 무책임의 결과로 보았다.¹⁵⁾ 그리스도의 왕권통치에 대한 절대적 신앙에 근거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양식은 세상에 정의와 질서를 확립하도록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런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와 경제는 이런 자유와 책임적 존재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바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책임사회론”인 것이다. “책임사회론”은 그래서 기독교에 그 터를 잡고 있지만 기독교적인 범주 내에서 머무를 수는 없다. 1954년 제2차 에반스톤(Evanston) 세계교회협의회는 “책임사회론”이 세상의 그 어떤 정치 경제 형태의 대안이 되는 것을 거부하지만, 그 속에서 사회질서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비판적 척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간에 모두 적용되며 비판적 규범이 될 수 있다.¹⁶⁾ “책임사회론”에서 교회는 사회문제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시되어야 한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세상의 낙관적인 진보를 갈망하면서 “책임사회론”을 전개해 나갈 때, 남북문제가 양산되었고, 제3세계 국가들 속에서 저개발

15)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 주제가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경륜”이란 것이 이를 시사하는 바이다.

16) Wendland, H. D., *Die verantwortliche Gesellschaft*, in: *Die Kirche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Hambrug: 1956), 126.

발의 문제, 평화의 문제, 정의로운 정치와 사회문제들이 일어났다. 1968년 제4차 워살라 총회는 “책임사회론”을 발전시켜 사회윤리적 패러다임을 “정의롭고 참여적이고 지탱 가능한 사회(Just, Participatory and Sustainable Society, 이하 JPSS)”로 수정했다. “JPSS”의 과정 속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기술의 진보로 인한 사회 발전도 복음의 중심적 요소로 봤으며, 동시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 대한 해방에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의와 참여가 미래 세대에서도 지속 가능하도록 교회는 사회 개념들과 더불어 사회윤리적 방향성을 설정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세상의 경제활동과 사회구조는 낙관론적 진보에서 이른바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1983년 제6차 밴쿠버(Vancouver) 총회에서 “정의, 평화 그리고 창조질서의 보전(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이하 JPIC)”을 위한 공의회 과정의 노선을 걷게 되었다.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펼치는 “공의회적 사회” 방법론은 기독교인들 또는 기독교 운동의 범주 속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론이다.¹⁷⁾ 로마 가톨릭의 공의회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지만,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JPIC라는 사회윤리 방법론은 다양성을 인정하기에 전통적 공의회와 거리를 두고 그 전에 반드시 공의회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공의회가 아니라 공의회적 효과를 가지는 “공의회성”¹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는 “공의회성”과 상응하는 것이다.

1998년 제8차 할랄레(Harare) 총회는 경제적 지구화와 서구의 일방적인 문화적 지구화에 대항하여 기독교 사회윤리적으로 저항하는데 동참할

17) 여기에 대해서는 Raiser, K., *Schritte auf dem Weg der Ökumene*. (Frankfurt am Main: Lembeck, 2005) 354를 참조하라.

18) 공의회성의 이해를 위해서는 Raiser, K., *Wir stehen noch am Anfang, Ökumene in einer veränderten Welt*, (Gütersloer: 1994), 53이하를 참조하라.

것을 요구했으며 2007년 제9차 포르토 알레그레(Porto Alegre) 총회는 경제적 지구화가 목표가 아닌 전 지구에 인간의 존엄성이 촉진되도록 기도하는 지구화의 기도자가 되도록 천명하고 있다.¹⁹⁾ 2013년 제10차 부산 총회가 “JPIC”의 중심주제 중 하나인 평화의 도래를 실현시킬 한반도에서 개취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어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였다.

에큐메니칼 운동에서의 사회윤리적 사고는 그리스도의 왕권통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세상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왕권통치의 인식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왕권통치를 기반으로 한 에큐메니칼 사회윤리는 3개의 패러다임, “책임사회론”, “JPSS”, 그리고 “JPIC”로 발전하였다. 특히 “JPIC”의 패러다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의화 과정은 1983년 이후부터 진행되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며 이어지고 있다.

4. 그리스도의 왕권통치로서 공공신학

칼뱅의 유산이 많이 남아있고 성행중인 한국 개신교에서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그리스도의 왕권통치라는 개념은 한국 개신교에 적용될 매력적인 사회윤리적 방법론이다. 독일 신학계에서 논의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형성될 수 있는 윤리(본회퍼), “보다 더” 좋은 또는 “보다 더” 옳은 비교급의 윤리(브라켈만) 그리고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의 매개를 통한 “실존적 종말론”의 윤리(리히), 여기에 그리스도의 왕권통치(바르트)는 볼프강 후버(Wolfgang Huber)의 공공신학에서 만날 수 있다. 교회론에 입각한 후버의 공공신학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는 곳, 곧 그리스도의 왕권통치의 영역이다. 이는 공간적으로는 전

19) 최경석, “다른 지구화를 위한 모델 찾기”, 『장신논단』, 제45-2집(2013), 20-21.

우주를, 시간적으로는 영원을 포함한 광대한 영역이다.²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임무를 위임받아 시민사회의 중재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

시선을 미국으로 돌려, 교회가 가지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교회 밖으로의 윤리”라 불리는 맥스 L.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의 공공신학, 예수 이야기를 담지한 공동체인 교회가 지속적으로 자정능력인 덕성을 회복하여 시민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의 교회됨”을 통한 이른바 “교회 안에서의 윤리”라 불리는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의 공공신학²¹⁾도 그리스도의 왕권통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책무를 강조한다고 본다.

에큐메니칼 운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책임사회론”에서 도출된 “JPSS”와 “JPIC”의 공의화 과정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영역과 생활영역을 넘나들며 실현가능한 준칙을 설정한다. 만민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이런 준칙을 설정하도록 교회는 그가 가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에큐메니칼 운동도 공공신학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윤리가 제도화된 생활사회에서 행위의 주체인 인간의 책임에 대해 묻는다²²⁾고 볼 때, 윤리학과 사회과학의 대화 속에서 윤리적 책임에 대해

20) Huber, W., *Öffentlichkeit und Kirche*, Honecker, M., (Hg.), *Evangelisches Soziallexikon*, (Stuttgart: 2001), 1169.

21) 이와 같은 견해로는 문시영, “S.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로서의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제20집(2010), 182.

22) 사회윤리나 경제윤리는 개인과 집단의 행위의 동기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책임을 묻고 제도문제에 윤리적 접근이 꼭 필요한 학문이다. 때문에 사회윤리나 경제윤리는 사회문제 또는 경제문제의 인식하고 윤리적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그 대안인 준칙을 설정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와같은 주장으로 강원돈, “책임윤리에서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갖는 지위와 성격”, 강원돈, 『지구화 시대의 사회윤리』, (파주: 한울 아카데미, 2005), 15-34.를 참조하라.

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기독교 사회윤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이미 위에서 언급되었다.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은 후버에 의하면 우주 전체를 의미하지만, 이를 축소시켜 범위를 정한다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사회구조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결정하는 큰 수준의 영역(Makro-Ebene), 둘째, 시민단체, 협동조합, 각종 연합체들, 경영인들과 같은 국가와 개인 사이 존재하는 행위의 중간 수준의 영역(Meso-Ebene) 그리고 셋째, 개인행동과 같은 작은 수준의 영역(Mikro-Ebene)이다.²³⁾ 작은 수준의 영역은 사회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인격적 책임의식과 개인적 양심에 의해 결정된 행위를 제시하는 것이다.²⁴⁾ 큰 수준의 영역은 국가의 입법정책과 그로 인해 형성되는 제도와 구조로 결정된다. 중간 수준의 영역은 개인들이 모인 집산체로 개인들 사이에서 형성된 책임과 양심으로 사회정책과 입법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사회윤리는 작은 수준의 영역과 큰 수준의 영역의 균형을 견지하면서 중간 수준의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요구된다.²⁵⁾

그러나 기독교 사회윤리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모든 영역에서 매 순간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통해 상대적인 공론의 장에서 절대적인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리히) 만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더 좋은 또는 옳은 제도를(브라켈만) 기독교적으로 형성하는 윤리(본회퍼)인 셈이다. 그것이 교회의 언어가 공공의 언어로 변화(스택하우스)하든지 그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됨을 회복(하우어워스)하든지 말이다. 그럼에도 이를 위해

23) Jähnichen, T., *Sozialer Protestantismus und moderne Wirtschaftskultur*, (Münster, 1998), 39-40.

24) 작은 수준의 영역에서 신학적 관점으로 개인윤리를 제시하고 개인의 인격적 책임에 관심을 보인 대표적 신학자는 툴리케(Helmut Thielicke)다. 특히 Thielicke, H., *Theologische Ethik. Bd. I*, (Tübingen: 1951), 711를 참조하라.

25) 이런 견해로 Jähnichen, T., 위의 책, 40.

서는 중간 수준의 영역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모색하고 발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독교 사회윤리의 과제인 것이다.

III. 한국 개신교의 경제운동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가 전개한 경제운동은 정치권력의 지배에 대항한 것과 사회구조의 개혁을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일련의 경제운동을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윤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²⁶⁾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한국 개신교는 1885년 두 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등장했다.²⁷⁾ 한국 개신교가 펼친 경제운동의 처음은 개인적 신앙과 윤리적 양심에서 출발한 일본상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납세거부운동으로 볼 수 있다. 개신교를 일찍이 수용했던 평안도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운동은 그 지역의 상인봉기운동으로 1909년 4월 일제의 통감부가 시장세를 제정, 공포하고 시장세를 강제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저항운동이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일제의 납세정책에 대한 거부운동이 평안도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²⁸⁾ 또한 조직을 구성해서 일제가 만든 상품의 불매운동도 더불어 나타났다.

1910년 치욕적인 한일합방이 실시된 이후,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를 실시하면서 한국의 토지를 수탈했다. 1920년대에는 이

26)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경제운동이 한국 개신교와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는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연구하는 한국교회사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며 그 운동의 윤리적 의미를 위해서는 일부 취사선택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27) 한국 개신교가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한 자발적 주체적 수용의 주장과 두 명의 선교사,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아펜첼러(H. G. Appenzeller)에 의한 수용의 주장 사이의 논쟁은 여전히 한국 개신교 역사학계에서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서 김용민, 「한국 개신교 정교 분리 원칙의 변용 과정에 관한 연구」(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6-7.

28) 한국기독교연구원, 『한국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89), 348-349.

른바 산미증산계획을 실시하여 쌀을 일본으로 반출했다. 이런 수탈은 농업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상공업에서도 일어났는데, 소위 회사령을 실시하여 한국인 기업보다는 일본인 기업을 우대 성장시켰다. 회사령이 철폐된 후에도 일제의 자본이 한국사회를 잠식했다. 1930년대에는 제국주의를 표방한 침략전쟁의 발판을 삼기 위해서 한국을 공업화 한다는 명목 하에 일제 자본의 독점이 가속화되었다. 일제의 수탈, 착취 그리고 자본독점화 현상으로 한국인의 빈곤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민족문제들 중 하나였다.

이 시점에 한국 개신교는 경제운동을 전개했다. 빈곤퇴치를 위한 경제적 실력양성론의 측면에서 전개된 운동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는 민족자본을 설립, 둘째는 소작쟁의와 노동쟁의를 통한 투쟁, 셋째는 도덕성 회복을 통한 절제운동 그리고 넷째는 농촌운동, 조합설립 운동과 같은 경제력 증진 운동이다.²⁹⁾ 우선 민족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물산장려운동이 실시되었다. 물산장려운동은 한국 개신교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그 운동의 중심에 개신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으며,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영향을 미친 것은 개신교였다.³⁰⁾ 소작쟁의나 노동쟁의는 한국 개신교에서 활발히 진행시키지 못했으며,³¹⁾ 금주, 금연, 공창제 폐지, 그리고 아편금지와 같은 절제운동에 한국 개신교가 많이 참여했다. 농촌운동은 한국 개신교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한 것으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 문맹퇴치, 농사개량, 그리고 협동정신 등을 함양시키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³²⁾ 1928년 예루살렘에 개최된 제2차 국제선교대

29) 이와 같은 견해로, 노치춘, 『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운동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1993), 241-242.

30) 이만열, 『한국 기독교와 역사 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1981), 340.

31) 물론 신간회와 근우회를 통한 소작쟁의와 노동쟁의는 있었으나 여기에 한국 개신교의 참여는 극히 미흡했다. 신용하,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 (서울: 로출판사, 1986), 42.

회의 참석자들이 덴마크를 방문하여 받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³²⁾ 이를 계기로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기독교청년회), 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기독교여성청년회), 장로교와 감리교 농촌부 등과 같은 한국 개신교는 각종 농촌운동기관을 설립하고 이들 기관이 연합하여 농촌사업협동위원회를 결성하였다.

1945년 해방, 1950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역사의 격변기를 겪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 개신교는 격변의 역사를 개척하거나 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매우 열약했다. 이 시기 한국 개신교는 기독교적 정의나 자유를 함양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독재 세력과 결탁하여 부정적인 현상을 연출시켰다.³⁴⁾ 이 시기에 경제 운동에서 주목할 만 것은 도시선교회의 역할이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이른바 ‘개발 독재’ 또는 ‘발전주의 국가’³⁵⁾의 틀 속에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을 추진했다. 박정희는 압축성장을 위해 노동억압과 노동배제를 일삼으며 독재적 성격의 경제발전을 추구했다.³⁶⁾ 1970년대 한국 개신교는 개인적 결단을 통해서 신앙고백에 입각한 선언문을 작성하거나 개별 투쟁을 진행했다.

32) 한기무,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18.
 33) 감리교 대표로 예루살렘 대회에 참가한 양주삼과 김활란은 덴마크를 시찰하였다. 그들은 덴마크의 발전된 농촌을 모델로 한국에서도 농촌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위의 책, 50.
 34) 이 당시 한국 개신교는 이승만 정권과 협력하면서 1960년 4.19 혁명 과정에서 이른바 공공의 적이 되었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김용민, 위의 논문, 83-88., 또한 이덕주, 조이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 (서울: 한들, 1997), 232.
 35) 강원돈은 1960년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의 한국사회의 복지정책을 거시적으로 기술하며 복지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기준을 마련한다. 그는 한국사회의 경제발전을 역사적으로 “국가주도형 발전주의 국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규정하며 기술한다. 강원돈, “한국사회의 복지정책에 대한 윤리적 평가-복지체제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기독교 사회윤리』, 제23집(2012), 7-52.
 36) 위의 글, 11.

경제문제를 주목하면서 선언서에 명시된 것을 살펴본다면, 우선 1972년 12월 유신헌법이 공포된 이후 1973년 5월에 나타난 “1973년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³⁷⁾은 주목할 만하다. 이 선언문은 당시 정권에게 가난한 자를 수탈하는 경제체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체제를 붕괴 하도록 투쟁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과정이 곧 “메시아의 나라”를 실현 하는 과정이라고 선언한다.³⁸⁾ 1974년 11월에는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이 노동자와 농민의 최저 생활의 보장을 촉구하는 선언을 채택했고³⁹⁾, 역시 1974년 11월 “한국 그리스도인의 신학적 성명”⁴⁰⁾은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개입과 경제구조의 병폐로 인한 당시의 인권 유린 현상을 비판한다.⁴¹⁾ 1976년 3월 “민주 구국 선언”⁴²⁾은 박정희 정권의 이른바 “경제입국”의 구상을 전면 반대한다. “경제입국”의 구상은 국가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며 오로지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기에 재검토되어야 하며 수출산업, 차관경제, 현대산업증진 등과 같은 경제정책으로 인해 노동자의 인권 유린과 농촌경제의 파탄을 초래하는 경제파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박정희의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팽창 예산을 지양하고 부의 재분배를 요구했다.⁴³⁾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는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의 틀 속에서 경제운동이 진행되었다. 한국 개신교에서 1970년 민중신학이 확산되어 1980년대, 민중신학에 이론을 둔 민중교회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민중신학의 이론을 실천의 장으로 매개하려는 민중교회의 노력은 노동현

37) 이 선언문 전문은 이덕주, 조이제, 앞의 책, 271-276을 참조하라.

38) 위의 책, 274-275.

39) 위의 책, 276.

40) 이 선언문 전문은 위의 책, 279-286을 참조하라.

41) 위의 책, 283.

42) 이 선언문의 전문은 위의 책, 288-292을 참조하라.

43) 위의 책, 290-291.

장과 농촌에서 운동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민중교회는 대중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신앙이 간과된 사회변혁운동에 주력했다. 특히 1987년은 계급운동과 민주화운동의 한 흐름이 마감되고 온건 개혁적인 시민운동이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 민주화 과정이 진행되고 정착되면서 한국 개신교는 직접 경제운동의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시민단체를 결성하여 경제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1987년 이후 개신교 경제운동을 펼친 몇몇의 시민단체를 선별적으로 정리한다면, 우선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가 언급될 수 있다. 이 단체는 1989년 기독교 계열의 민중 경제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기독교 사회운동연합(기사련)을 개편한 시민단체로 1996년에 조직되어⁴⁴⁾ 1976년에 결성된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를 계승하여 빈민운동 노동운동에 주력하고자 했으나 그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단지 기사련은 민중교회가 개신교의 토대를 벗어나 시민운동으로 변모하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⁴⁵⁾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1987년에 개인의 도덕성 회복이라는 개인윤리적 측면을 강조하여 사회적 공의를 이루려 창립되었다.⁴⁶⁾ 기윤실이 주도한 경제운동에서도 개인윤리적 측면이 강조되었는데, 주로 검소, 절제운동을 기반으로 “소형차타기운동”, “검소한 결혼문화운동”, “사랑의 빵 모금운동” 등을 진행시키고 있다.

개신교 계통의 시민운동 중에서 우리나라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44) 장규식, “민주화 이후 한국의 개신교와 시민사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8호(2018), 17.

45) 기사련은 당시 민중교회가 참여연대, 지역복지연대, 녹색연합 등과 같은 각종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개신교 시민단체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평가로, 이수인, “1987년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변동과 개신교의 정치사회적 태도”, 『경제와 사회』, 제56호(2002), 279-280을 참조하라.

46) 장규식, 앞의 글, 15.

시민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라 말할 수 있다. 경실련은 YMCA를 뿌리로 두면서 1987년 7월에 창립되었기 때문이다.⁴⁷⁾ 경실련의 경제운동에 앞서 YMCA는 이미 1984년부터 소비자운동과 외채문제 해결과 같은 경제문제에 깊이 관여하면서 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1991년에는 생활협동조합과 알뜰시장 등을 운영했다.⁴⁸⁾

경실련은 창립 초기부터 경제정의 실현, 민주복지사회 건설을 기치로 삼아 다양한 시민운동을 펼치면서 성장하고 있다. 도시빈민과 농촌의 빈곤,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토대 약화, 이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라는 “경제적 불의”는 비윤리성을 축적시켜 공동체의 윤리전반을 문란케 하는 당시의 사회현상에 “경제적 불의를 척결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함”이 경실련이 바라 본 역사적 과제였다.⁴⁹⁾ 특히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였으며 이로 인한 지가의 폭등을 “경제적 사회적 불안과 부정”의 중요한 원인으로 경실련은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시장경제를 옹호하면서도 “정부는 시장경제가 가지는 결함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한다. 시장경제의 결함의 해결을 “민주복지사회”라 명명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윤리적 규범은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로 표명한다. 경실련이 표방하는 목표는 경제정의와 민주복지사회의 건설임을 분명히 하면서 “경제정의 실천을 위하여 발언하고 행동하자”라고 천명한다.⁵⁰⁾

47) 위의 글, 13. 경실련의 조직을 결성하는 단초를 마련한 사람들은 당시 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장이었던 서경석, YMCA 시민운동가였던 신대균 그리고 유종성 등이었다. 경실련이 개신교에서 파생된 시민단체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개신교 입장에서는 경실련이 개신교에서 파생된 것이라 주장해도 무방하나, 시민단체나 신학 이외에서, 특히 사회과학에서 경실련은 하나의 시민단체임을 피력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이 아닌 역사학 분야의 장규식은 경실련이 개신교의 YMCA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평가는 경실련이 개신교에서 파생된 하나의 시민단체임을 상기시켜준다고 본다.

48) 위의 글, 14.

49) “경실련 발기선언문”, file:///C:/Users/VIP/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 Cache/IE/ENY3BXO0/별첨.-발기선언문.pdf, 2018년 10월 22일 접속.

경실련은 “경제성장과 복지, 민주주의와 통일의 지름길”이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은 계급과 그 반대의 계급이 생기게 된 “경제적 부정의와 망국적 불로소득의 척결”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제정의를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화하도록 시민들이 함께 모인 시민단체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건전한 시민행동이 정착화 되도록 경실련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운동”임을 천명한다. 경실련의 목표는 “서민 계층의 입장에 확고히 서서 분배 5개년 계획이나 분배 10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성취해 내는 것”이다.⁵¹⁾

주지하듯이 경실련은 초기부터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라는 강경한 담론을 형성시키면서 결국 1993년 김영삼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토지공개념”의 경우 현재까지 논란은 많으나 당시 “공시지가제도”와 “종합토지세제”를 배태하기 했다. 1989년부터 1994년까지 경실련의 담론의 주요 의제는 경제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경제문제였다.⁵²⁾ 1995년부터는 그 전에 담론으로 형성했던 논제들을 현실화시키는 운동으로 발전했다. 여전히 정부의 경제정책과 세제개혁이 주요 담론으로 형성되었으나 외연의 확장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다양한 의제들과 사회적 쟁점사항들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⁵³⁾ 경실련은 최근까지도

50) 모든 인용은 위의 글.

51) 모든 인용은 “경실련 취지선언문” file:///C:/Users/VIP/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IEM2J3IS/별첨.-취지선언문.pdf, 2018년 10월 22일 접속.

52) 박해광은 1989년부터 1994년까지 경실련의 담론의 주제를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세입자보호, 의정활동개혁, 이문옥감사관지지, 향락퇴폐업소 척결, 공명선거 감시, 금리자유화, 재벌 증여상속 문제, 공정거래법, 쌀시장 개방 반대, 부정부패추방, 신경제정책 평가, 한양약분쟁조정, 장애인 교통대책, 정보공개법, 세제개혁, 정치관계법 및 국회법 개정, 교통정책 개선, 지속가능한 발전, 주요 강 수질오염, UR재협상 촉구, 지방자치법 개정, ABS 기준마련, 중앙은행 독립 촉구, 농안법 개정, 행정구조개혁”으로 언급했다. 박해광, “시민사회의 담론적 실천과 영향력의 정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 2호, (2011), 142. 이중 대다수가 당시 경제문제에 천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경제정의와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민운동을 실시하고 있다.⁵⁴⁾

아울러 최근에는 한국 개신교 내부에서 마을공동체 또는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의 일환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경제운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흡하다.⁵⁵⁾

IV. 한국 개신교 경제운동에 대한 사회윤리적 평가와 그 과제

한국 개신교에서의 경제운동은 일제하와 군사 독재정권 치하에서는 주로 정치권력 지배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전개되었으나, 한국에 민주화가 형성되는 시기부터는 주로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처음에는 개인의 윤리와 양심의 발로에서 시작된 경제운동들은 점차 조직적으로 발전하여 최근에는 시민사회단체까지로 확장되었다.

일제의 침략과 강점기 때, 한국 개신교가 절제운동과 농촌운동에 많이

53) 위의 글, 147.

54) 경실련의 최근까지 활동들은 경실련 홈페이지 <http://cccj.or.kr/intro/history>를 접속하면 볼 수 있다.

55) 김혜령은 한국 개신교가 마을공동체 형성에서 소외된 이유를 첫째, 한국 개신교의 주류가 대형교회임을 들며, 그와 반대로 무수히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마을 또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함을 셋째, 한국 개신교의 이원론적 구원관 넷째, 한국 개신교의 반세속주의라고 꼽고 있다. 김혜령, “마을공동체운동과 마을교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7집(2013), 224-228. 물론 부천의 새롬교회는 한국 개신교에서 마을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로 꼽힌다. 이를 위해서는 조용훈, “마을만들기를 통한 지역교회 활성화 방안”, 『기독교사회윤리』, 제24집(2012), 230-236을 참조하라. 조용훈은 조용훈,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이해”, 『기독교사회윤리』, 제33집(2015), 358-364,에서 한국 개신교에서 주도한 협동조합을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YMCA의 협동조합과 평양소비조합, 1960년대 이후에는 풀무원 협동조합, 도시산업선교회에서 펼친 협동조합, 기장에서 실시한 주민생활, 예장 통합에서 실시한 예장생활과 농도생활 등이 언급될 수 있고, 최근에는 ‘온생명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 개신교가 주도한 사업은 그 실태가 여전히 미비하다. 이와 같은 평가로 이종원,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본 사회적 협동조합”, 『기독교사회윤리』, 제37집(2017), 196.

참여한 이유는 이 운동이 비교적 합법적이며 온건한 노선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기독교의 윤리성에 호소한 신앙운동으로 절제운동, 농촌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피폐한 농촌을 경제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농촌운동으로 한국 개신교가 접근이 용이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시기의 한국 개신교 경제운동은 일제의 경제수탈로부터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해석되며 이를 위한 자립경제를 우선적으로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정희 독재시대에서 한국 개신교가 제창한 선언문들은 주로 당시 독재정권의 상황과 연관되어 경제문제에 대한 선언들이었으며 주로 노동자 또는 농민의 인권과 연결을 지어 경제문제를 신학적 또는 신앙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이 시기에 태동한 민중신학과 민중교회는 노동현장과 농촌에 침투하여 뿌리 내림을 꾀하였으나 민주화가 진행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민운동에게 바통을 넘겨주었다.

1987년 이후 시민운동은 개인윤리를 강조하는 기윤실과 사회윤리적 담론에서 경제정의를 이룩하려는 경실련을 필두로 펼쳐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지만 마을 공동체와 협동조합의 형태로 한국 사회의 경제문제에 전반에 걸쳐 경제운동을 실행하고 있다.

기독교 사회윤리가 지향하는 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통치의 영역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공공신학임을 주지할 때, 한국 개신교의 경제운동은 교회의 역량을 강화시켜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사업일 것이다. 한국 교회는 비록 지금은 미흡할지라도, 시민단체와 연결해서 지역사회의 경제문제에 관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마을공동체와 경제 협동조합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꼽힐 수 있다. 또한 경제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연계해서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범제화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자유주의를 필두로 별

어지고 있는 경제적 지구화에 맞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의 지구화가 실현되도록 세계교회협의회와 같은 단체들과 연합하여 활동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

V. 나가는 말

기독교 사회윤리의 틀에서 한국 개신교의 경제운동은 이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야 한다. 한국 개신교가 경제운동에 직접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던 시기에서 이제는 각 사회단체와 연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경제적 지구화 속에서 기존의 축복신학이 여전히 신앙의 척도로 위장된 한국 개신교는 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배타성을 배태하여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있다. 기독교 사회윤리는 이를 넘어서 절대적 그리스도의 왕권통치를 상대적 세상에 실현시키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한국 개신교의 경제운동은 새로운 시대정신에 따라 설립된 각종 시민운동들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를 만들어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연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 개신교의 성직자들은 하나님 말씀 선포와 성례에 힘쓰고 역량 있는 평신도들이 경제운동의 전면에 나서서 그리스도의 왕권통치에 조응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돈. “책임윤리에서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갖는 지위와 성격.” 강원돈 편. 『지구화 시대의 사회윤리』. 파주: 한울 아카데미, 2005. 15-34.
- _____. “한국사회의 복지정책에 대한 윤리적 평가-복지체제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23집(2012), 7-52.
- 김용민. 『한국 개신교 정교 분리 원칙의 변용 과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논문(2014).
- 김혜령. “마을공동체운동과 마을교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7집(2013). 197-236.
- 노치준. 『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운동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1993.
- 문시영. “S.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로서의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제20집(2010), 163~189.
- 박해광. “시민사회의 담론적 실천과 영향력의 정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 2호(2011). 133-166.
- 신용하.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 서울: 로출판사, 1986.
- 이덕주, 조이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 서울: 한들, 1997.
- 이만열. 『한국 기독교와 역사 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1981.
- 이수인. “1987년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변동과 개신교의 정치사회적 태도.” 『경제와 사회』. 제56호(2002), 264-291.
- 이종원.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본 사회적 협동조합.” 『기독교사회윤리』. 제37집(2017), 179-210.
- 장규식. “민주화 이후 한국의 개신교와 시민사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8호(2018), 4-30.
- 조용훈. “마을만들기를 통한 지역교회 활성화 방안.” 『기독교사회윤리』. 제24집(2012), 223-246.
- _____.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이해.” 『기독교사회윤리』. 제33집(2015), 349-377.
- 최경석.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19집(2010), 205-235.
- _____. “다른 지구화를 위한 모델 찾기.” 『장신논단』. 제45-2집(2013), 13-39.

- 한국기독교연구원. 『한국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89.
- 한규무.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 Barth, K., *Der Römerbrief*, 2. Aufl. München: 1922.
- Barth, K., *Christengemeinde und Bürgergemeinde*. München: 1946.
- Bonhoeffer, D., *Ethik*. München: 1981.
- Brakelmann, G., (Hg.), *Günter Brakelmann: Ein Theologe in Konflikten seiner Zeit*. Münster: 2006.
- Huber, W., *Öffentlichkeit und Kirche*, Honecker, M., (Hg.), *Evangelisches Soziallexikon*. Stuttgart: 2001, 1153-1173.
- Jähnichen, T., *Vom Industrieuntertan zum Industriebürger. Der soziale Protestantismus und die Entwicklung der Mitbestimmung (1848-1955)*. Bochum: 1993.
- Jähnichen, T., *Sozialethik*, Honecker, M., (Hg.), *Evangelisches Soziallexikon*. Stuttgart: 2001, 1440-1448.
- Jähnichen, T., *Sozialer Protestantismus und moderne Wirtschaftskultur*. Münster, 1998.
- Lender, M., *Ökumenische Bewegung und Sozialethik*, in: M. Honecker (Hg.), *Evangelische Soziallexikon*. Stuttgart: 2001.
- Raiser, K., *Wir stehen noch am Anfang, Ökumene in einer veränderten Welt*. Gütersloh: 1994
- Raiser, K., *Schritte auf dem Weg der Ökumene*. Frankfurt am Main: Lembeck, 2005.
- Rich, A., *Wirtschaftsethik Bd. I, Grundlagen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Gütersloh: 1987, 강원돈 역, 『경제윤리 I』.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3.
- Thielicke, H., *Theologische Ethik. Bd. I*. Tübingen: 1951.
- Wendland, H. D., *Die verantwortliche Gesellschaft, in: Die Kirche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Hambrug: 1956.
- Wendland, H., D., *Einführung in die Sozialethik*. Berlin: 1963.

• 인터넷 자료

“경실련 발기선언문”, file:///C:/Users/VIP/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ENY3BXO0/별첨.-발기선언문.pdf.

“경실련 취지선언문”, file:///C:/Users/VIP/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IEM2J3IS/별첨.-취지선언문.pdf.

논문투고일: 2018년 10월31일

심사개시일: 2019년 11월09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11일

 • 국 문 초 록 •

모든 인간은 사회제도 속에서 존재하며 심지어지는 “나”란 주체도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인간은 사회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호작용에 책임을 짊어져야할 윤리적 존재다. 그러기에 모든 윤리는 사회윤리라는 말은 유용하다. 여기에 기독교라는 특수한 시각으로 조망되는 것이 기독교 사회윤리인 셈이다. 경제윤리는 사회윤리의 특수한 한 사례다. 한국 개신교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회문제들에 직간접으로 참여함으로써 해결책에 대한 대안과 방향성을 나름대로 제안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경제문제들에 어떻게 참여했는지이다. 개신교의 수용부터 현재까지 역사적 추적을 통해서 그것을 기독교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과 앞으로의 방안을 제시하는 일은 오늘의 한국 개신교에게 일부 필요한 작업이다. 기독교 사회윤리가 지향하는 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통치의 영역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공공신학임을 주지할 때, 한국 개신교의 경제운동은 교회의 역량을 강화시켜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사업일 것이다.

주제어: 사회윤리, 경제문제, 한국 개신교, 칼 바르트, 에큐메니칼 운동
